

## 신품종 김 ‘햇바디1호’ 시험양식 성공...생산량·소득 2배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간 생산횟수 2배 이상 많은 4회

풍부한 영양분 함유 국내외 시장서 충분한 경쟁력 갖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기존의 잇바디돌김보다 생산량과 소득이 2배 높은 신품종 ‘햇바디 1호’ 시험양식을 전국 최초로 성공했다. 잇바디돌김은 우리나라 토종 김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선호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전남지역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으며, 길이

가 길고 가늘며 구불구불한 모양 때문에 ‘곱창김’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잇바디돌김 양식은 씨앗(각포자) 형성이 낮고 김발에 씨앗을 붙이기 어려워 생산량이 일정치 않았다. 또 바다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업인들이 양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시험양식에 성공한 햇바디1호는 잇바디돌김보다 씨앗주머니(각포자)에서 많은 씨앗을 방출해 김발에 씨앗 부착률이 높다. 연간 생산횟수도 4회로 잇바디돌김보다 배 이상 생산량이 많고, 단백질과 글루탐산 등 풍부한 영양분을 많이 함유해 국내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햇바디1호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개발한 5번째 품종이다. ‘해풍1호’, ‘해모돌1호’와 함께 잇바디돌김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해 김 양식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지역별 특

성에 맞는 품종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오동도

### 순천만정원·낙안읍성 등 설 연휴 방문객 ‘급감’

올해 설 연휴 나흘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전남 순천의 대표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 설 연휴 4대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총 3만802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설 8만1720명→ 올해 설 3만8028명으로 줄어  
여수 오동도는 3만8010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순천만국가정원은 1만1636명, 순천만습지 1만3763명, 드라마촬영장 3097명, 낙안읍성 9532명 등이며 전체 방문객 3만8000여 명 중 1만6163명이 설 다음 날인 토요일 나들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연휴였던 작년 설 명절 기간 8만1720명과 추석 8만6949명이 순천의 4대 관광지를 찾은 것에 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순천시 관계자는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정부 지침으로 귀성객 감소 및 관광지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여수시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에는 3만8010명이 다녀갔다.

이는 작년 설 연휴 3만9265명과 비슷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여수를 찾는 관광객은 소폭 감소했거나 현상 유지 상태. 오동도,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여수에 솔랜드 등에 집중됐으며 펜션과 숙박시설이 많은 돌산지역은 연휴 내내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불편을 겪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 자치경찰제 본격 ‘시동’...오는 7월 정식 출범

광주시에 광주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본격에 올랐다.

2급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인사, 예산, 정치적 중립성, 지역민 참여 보장 등은 연착륙을 위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과 및 밀접한 수사 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8일 자치행정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를제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

광주시·광주청, 전담 조직 설치  
조례 제정·개정 실무 작업 착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도 설치  
인사·예산·정치 중립성 등 과제

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무국도 설치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

획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 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 수렴 간담회’도 구성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당직과 선출직은 물론 경찰·검찰·국정원·군인, 국가와 지방직공무원 모두 퇴직 3년이 지나야 원장에 지원할 수 있어 2급 상당 위원장에 적격자가 나올 지가 관심사고,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치안 불균형과 검경수사권 분담과 맞물린 역할 분담, 지방권력과 유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지역밀착형 치안을 위한 주민참여 보장 등도 풀어야 할 과제들로 거론되고 있다.

김일용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 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